

‘아수라장’ 바른미래 의총...결국 쪼개지나

“손 즉각퇴진” vs “당 분열 꿈수”
이언주 당직자들과 몸싸움
패스트트랙 지정 결론 못내

선 의원), “이언주 의원은 발언권이 없다. 참관만 허락한다”(김관영 원내대표), “이언주 의원은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라”(임재훈 의원) 등 손 대표 체제를 옹호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양측 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정작 의총의 핵심 안건이었던 패스트트랙 문제는 회의 시작 후 1시간이 넘어서야 논의됐다. 원내 지도부는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과 마련한 패스트트랙 잠정 합의안에 대한 의견을 재차 수렴한 후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까지 강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격하게 반대하면서 표결처리는 결국 무산됐다.

특히 의총 도중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줘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발언이 전해지면서 기류가 급변했다. 유승민 전 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원내대표는 합의안이 있다고 했지만 김 원내대표는 그것을 부인했는데 과거에 이런 식으로는 합의하지 않았다”며 “최종 합의는 됐다는 것은 양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구체적 안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대표는 “이런 상태에서 바른미래당은 바보같이 의총을 하고 있다”며 “다수의 횡포로 밀어붙이자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되며 자기들의 선거에서 이익만

생각하는 사안에 우리가 놀아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날 오전 9시부터 3시간 30분간 진행된 의총은 당내 분란만 공식화한 모양새가 됐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민주당과의 최종 합의사항을 전달하고 이를 추진받으려는 절차를 진행하려 했지만 홍 원내대표가 합의안을 반박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더는 논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관련해 양당간 조만간 최종 합의안을 만들어 문서화한 뒤 다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18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김관영 원내대표와 이상욱 의원이 언론 공개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18일 손학규 대표의 진퇴 문제를 놓고 두쪽으로 나뉘어 정면 충돌하면서 분당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또 이날 결정할 예정이었던 선거제 개편안 및 공수처 법안의 패스트 트랙 지정 여부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바른미래당이 18일 손학규 대표의 진퇴 문제를 놓고 두쪽으로 나뉘어 정면 충돌하면서 분당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또 이날 결정할 예정이었던 선거제 개편안 및 공수처 법안의 패스트 트랙 지정 여부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는 손학규 대표 옹호와 퇴진파 간에 고성인 난무했다. 특히 손 대표가 최근 내세운 ‘제3지대론’ 작업의 일환으로 호남신당 창당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증폭되면서 바른정당계 일부 의원들은 손 대표가 ‘해당(害黨) 행위’를 하고 있다며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당 출신 일부 중진의원들은 손 대표를 감싸며 지도부 사퇴론이야말로 당을 분열시키려는 꼼수라며 맞받았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다수 의원들에 따르면, 손 대표는 회의 시작에 앞서 “당 혼란에 죄송하다. 여러 정계개편설이 있지만, 거대 양당체제 극복이 중요하다. 단합하자”는 입장을 강조했다. 평화당과의 제3지대 정계개편과 관련, 서둘러 방어막을 친 것이다.
그러나 손 대표에 대한 막말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이언주 의원은 이날 의총장 진입을 막는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인데 이어 손 대표에게 “즉각 당 대표직을 그만 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욱 의원도 “(호남신당 창당과 관련한)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손 대표와 박우선 의원은 각성하라”며 가세했다. 박우선 의원은 “대표를 흔드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박우

당정, 추경안 이달 제출...“국민 안전·민생 주력”

다음달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
강원 산불·포항 지진 적극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5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과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추경안의 핵심 추진 사업과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조영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이번 추경안의 목표를 국민안전 확보와 민생 긴급지원으로 설정하고, 핵심 추진 사업으로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당정은 우선 강원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희망 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산림복구와 소방헬기 등 장비보강,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등과 관련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포항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자금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지원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포항 흥해 특별재

생사업 매칭 비율을 70%에서 80%로 높이고,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20만대 이상 최대 물량으로 추가 지원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 사업장 먼지 방지시설,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노후 SOC에 대한 안전투자 일정을 앞당기기로 방침을 세웠다.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긴급 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을 반영하고,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기업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 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 다중 이용 업소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기 전(2009년 7월 이전) 개원한 1천826개 업소에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앞서 6조 원대로 알려진 추경의 적절한 규모를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광주시의회, 도시철도 2호선 착공식 예산 삭감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8일 광주시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도시철도 2호선 착공식 예산 25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했다.
시는 오는 6월 예정인 착공식 예산 42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증액해 추경 예산안에 편성했다. 산건위는 광주도 시철도건설본부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도 75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했다.
산건위 장연주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 증액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착공식을 검소하게 추진하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론화 절차로 쓰지 못한 이월 예산(4천만원)으로 착공식을 하려 했으나, 다른 착공식 사례를 검토했을 때 행사 장비 임대 등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오는 26~29일 예정위와 30일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을 확정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형배·이미션 헌법재판관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또 불발

박지원 의원 불참 과반 못채워...대통령 오늘 재개 전망에 정국 경색될 듯

문형배·이미션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또다시 불발됐다.
이에 따라 해외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통해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여 정국이 더욱 꼬일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서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형배 후보자 청문보고서만 채택하자

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은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모두 채택해야 한다며 회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위원장은 “3당 간사간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해도 대통령이 지명하고, 재송부 요청까지 한 마당에 적어도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며 “회의를 열지 못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송기현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채택하지 못하겠다는 야당

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상당 부분 해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며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간사 협의 없이 안건을 상정하는 일은 없었다. 독단적인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청문보고서가 처리되지 못한 것은 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불참이 결정적이었다.
국회법에 따라 안건을 표결에 부치려면 재적의원 과반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박 의원의 불참으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조건을 채

우지 못했다. 한국당은 법사위 전체 위원 18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이 전원 불참하더라도 10명은 채울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박 의원이 불참하면서 9명만이 회의에 참석하는 데 그쳤다. 박 의원은 그동안 이미션 헌법재판관 후보가 임명되는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날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중앙아시아 3국을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9일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할 전망이다. 이에 야권은 강력 반발하면서 정국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일보 뉴스 NAVER 공식 포스트에서 보세요

박영선 중기부 장관 22일 광주 방문...민생 행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는 22일 광주를 방문한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22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진곡 산업단지, 1913 송정역 시장 등을 방문한다.
박 장관은 대기업과 상생 협력방안을 주제로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 사항을 청취한 뒤 진곡 수소스테이션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한

다. 박 장관은 1913 송정역 상인들과 간담회에 이어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직접 장을 본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박 장관이 민생현장을 직접 챙겨보는 일환으로 광주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8일 취임 후 강원 산불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방문하는 등 민생 행보를 가속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